



오리산업의 규모는 해마다 성장하면서 축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나 취약한 산업구조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불안한 수급불균형 등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이다. 우리 협회는 오리산업이 당면한 현안 문제를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13일(화), 대전 유성 호텔에서 「오리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은 제1부(연구결과 발표 및 주제발표)와 제2부(지정토론 및 종합토론)로 나누어 진행됐다. 아래는 워크숍 지상중계 전문이다.

오리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FTA시대 오리산업이 나아갈 방향은?

● 워크숍 개요

행사명 : FTA시대, 오리산업이 나아갈 방향은?

일시 : 2011년 12월 13일

장소 : 대전 유성호텔

주최 : 한국오리협회

주관 : 축산신문사

후원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연구결과발표 : 중국 오리산업 현황과 한·중 FTA체결이 국내오리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내 오리산업 유통활성화 및 세계화 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김정주 교수>

주제발표 : 제 1주제 오리산업 발전방안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노수현과장>
제 2주제 오리산업 현황과 나아가야 할 길<국립축산과학원 가금과 서옥석과장>

지정토론 : 오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 <모란식품 김만섭대표>
오리유통구조 실태와 해결 과제 <주원산오리 이우진대표>
오리농가 실태와 정책 지원 방안<오리협회 전남도지회장>
오리고기 소비 확대를 위한 제언 <한국소비생활연구원 김연화위원장>

- 사진 : 축산신문 김길호 부장 / 한국오리협회 편집부
- 기록정리 : 축산신문 이희영 차장 / 한국오리협회 편집부

오리업계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적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오리협회(회장 이창호)는 지난 12월 13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FTA시대 위기의 오리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이란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정부는 물론 오리업계는 최근 오리업계가 생산량 증가로 인해 불황을 겪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오리산업이 성장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오리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불황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무분별한 F1오리의 근절과 오리농가 축사시설 현대와 유통구조 개선, 다양한 요리개발, 보다 안전한 오리고기 생산은 오리업계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연구결과 발표

중국의 오리산업과 한중FTA 영향분석
건국대 김정주 교수

중국은 전 세계 오리 생산량 22억5천200만수의 74%인 16억8천200만수를 생산하는 세계최대의 오리 생산 국가이면서 최대 소비 국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중국과는 지난 2004년 한·중 통상장관이 민간 공동연구개최 추진을 합의한 이래 2010년 11월 FTA협상 전 단계인 민감 분야 사전협의를 서울에서 개최했는데 중국은 사전협약에서 논의된 내용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정식협상에 착수해 개방 예외 품목을 사전에 미리 정하지 말자는 주장을 하고 있어 한국과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중국은 농업 강국이면서도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 농업을 보호하는데 힘을 써왔다. 중국은 전체 농산물의 4.3%인 50개 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고 뉴질랜드와의 FTA에서는 뉴질랜드 현행 수출액의 4%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동식물 검역과 관련 위해성 분석제도와 동식물 질병 '지역화' 개념을 도입할 것을 이행약속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는 한·중FTA에 대한 한국 오리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예측하고 중국의 오리산업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한 대책을 세우는 일은 아무리 서둘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오리산업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중국과의 FTA는 국내 오리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의 오리산업은 상시 사육수수가 우리나라의 53배에 달하며 오리고기 생산량은 23배, 농가수는 무려 1천200배가 많기 때문에 대책 없이 FTA가

| 행사스케치 |

체결될 경우 큰 난관에 부딪칠 것이다.

FTA에 대해 정부나 찬성론자들은 중국과 FTA가 체결되면 수출이 늘어나고 국내총생산이 더 성장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내총생산량 증가만으로는 농업인들을 설득하고 저항을 잠재우지는 못할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성장된 국내총생산량이 농업인들에게 배분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득을 얻은 사람들이 손실을 보는 사람들에게 보상해 줌으로써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정책 변화의 정당성이 확보 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중FTA에 의해서 생긴 소비자의 이득이 오리생산 농가들에게 배분되거나 적어도 손해가 보상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농업인을 설득하고 사회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필수조건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마냥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경우 연간 소득이 100억원 이상이 되는 인구가 1천만명에 이르며 이들은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품질과 안전을 중요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공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충분히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특히 중국내 식품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자국 식품에 대한 불신이 높기 때문에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가격과 상관없이 수입을 해 먹을 수 있는 소비자들이다.

아울러 일본과 미국, 홍콩 등과 같은 지역으로도 수출이 가능해 진다면 국내 오리산업의 성장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이다.

주제발표

제1주제

‘FTA시대 오리산업 발전방안’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노수현 과장

지난해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FMD로 인해 축산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오리업계 역시 HPAI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때문에 무엇보다 축산업과 오리산업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FMD나 AI같은 악성질병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AI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차단방역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내 농장부터 철저히 차단해야만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외부인의 농장 출입자체를 막고 농장주 역시 다른 농장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축산업 허가제이다. 축산업 허가제는 산업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난해 발생한 FMD와 AI사태를 되돌아보면 나 혼자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질병 전파를 막을 수 없었던 사례가 있었다.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다 같이 열심히 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축산업허가제는 다 같이 잘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축산업에 신규로 진출하는 농가는 80시간 교육을 통해 축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습득시키고 기존 농가들의 경우 20시간의 교육을 통해 기본에 충실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축사시설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현재 많은 축사들이 외부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데 최소한 울타리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야생동물은 물론 사람들의 출입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농장 소독을 위한 샤워시설이나 소독 시설은 갖춰야 할 것이다.

축산업 허가제는 종축업과 부화업의 경우 2012년부터 시행하고 사육업은 단계적으로 2012년에는 1만수 이상, 2013년은 5천수 이상, 2014년은 3천수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농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료, 분뇨 운송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제를 실시해 모든 차량에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해 이동경로를 정확히 파악해 질병의 확산을 최단 시간 내 막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도 축사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올해 1천600억 규모에서 내년에는 이보다 3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오리산업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음식점원산지표시 정착, 사료내 항생제 사용금지 및 사료비 절감대책을 추진하고 항생제 저감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연구사업, 오리사양관리 매뉴얼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 AI재발 방지대책으로 연중 상시방역체계를 가동해 주요 철새도래지를 비롯



| 행사스케치 |

해 과거 발생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군 지자체의 초동방역팀을 강화해 이동경로를 최대한 빨리 차단해 초기에 질병을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계열화업체와 농가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축산계열화사업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오리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계열사와 농가간 신뢰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서로간의 대화의 통로를 만들고 서로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축산계열화법을 통해 서로간의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객관적으로 이를 해결해 주는 것이 법의 주요 골자이다.

제2주제

오리산업 현황과 나아가야 할 길
국립축산과학원 가금과 서육석 과장

국내 오리 사육규모는 5천126농가에서 1천293만수의 오리를 키우고 있다. 이중 1만수 이상 사육농가는 13.4%인 680호로 이들 농가에서 전체 오리의 87.5%를 키우고 있다.



이러한 오리산업은 국민 1인당 축산물 소비량 54.5kg 중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생산액은 1조3천509억원으로 전체 농산물 중 7위를 차지하고 있다.

오리산업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우선 강점은 오리고기가 건강식품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는 것이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식품가공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탄탄한 생산과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종자기반이 취약하고 사육시설이 열악하며 회식 위주의 소비문화는 약점이다. 그러나 한류열풍을 비롯해 오리 주요 소비국에 둘러싸인 지리적 여건은 기회의 요인이 될 수도 있으나 AI, 축산업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 등은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오리산업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오리업계를 위협하는 요인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우선 AI의 경우 오리업계 스스로 죽을 각오로 막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오리고기가 웰빙 식품이라는 이미지를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사육시설을 개선하고 각종 인증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장수국민에 걸맞는 요리법 개발 등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소비시장의 다변화를 통한 신규 수요를 창출해야하는 과제도 있다. 건강과 편의 전통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가정이나 군대에서 먹을 수 있는 요리를 개발해야 한다.

또 유전자원의 해외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국내 종오리 개발을 서둘러 차별화된 오리고기 생산에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같은 노력이 뒷받침 된다면 향후 오리산업은 지금의 5배 이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정토론



2007년 이전 만하더라도 오리산업이 농산물 30대 품목 중 15위에 불과했다. 하지만 3년만에 7위로 성장했으며 3년째 이를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오리산업은 외형적으로 급성장했지만 아직까지 성장과정에서 균형 있



좌장 충남대학교 박종수 교수

는 발전을 이뤄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오리산업은 생산액은 크지만 기술적인 문제나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아직까지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축산강대국들과의 FTA로 인해 수입축산물이 늘어날 경우 결국 국내산 축산물 소비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오리고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고 미래를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리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은

현재 오리업계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더 이상 오리산업 미래는 없을 것이다.

농산물 중에서 가장 먼저 개방된 것이 바로 오리고기다. 오리산업은 80년대 초반에 처음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오리산업의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불과 10여년에 불과하다.

2003년 AI가 발생되기 전까지 2000년대 초반까지는 오리고기 수입이 많았다. 하지만 국내 오리산업이 커지면서 오리고기 소비가 늘어나고 수입량은 줄어들었다.

또한 오리고기는 1990년대 말부터 보양식품으로 인식됐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웰빙식품으로 각광받으면서 급성장해 왔다.

또한 3년전까지만 해도 3~5%에 불과했던 가정소비가 최근에는 20%까지 늘어난 것도 오리산업을 성장하게 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종오리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착하지 못하고 무분별한 F1입식으로 인해 산업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오리산업의 안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F1오리는 근절돼야 한다.

F1오리 사육이 종식되지 않을 경우 현재 직면한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 종오리데이터베이스 사업도 역시 완전히 정착되지 못했는데 정착하기 위해서는 종오리 농가에 대한 더 많은 교육과 관리가 이뤄져야 하며 나아가서는 육용오리 데이터베이스 사업도 추진해 수급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축산업 선진화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오리의 경우 상대적으로 타 축종에 비해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축사시설이나 여건에 있어서 가장 많이 지원받아야 하는 축종이 바로 오리임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보고 있다. 향후에는 오리분야에 더 많은 예산이



모란식품 김만섭 대표
한국오리협회 고문

배정돼야 할 것이다.

또한 안정적인 오리고기 소비처 확보를 위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군납 물량을 늘려야 할 것이다. 오리고기는 현재 군인 1인당 하루 1.35g에 불과해 타 육류에 비해 적은데 반드시 군납물량은 늘려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현재 오리업계가 당면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현재 업체들이 안고 있는 재고를 처리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라 생산량을 어떻게 줄여야 할 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지난해까지 오리산업은 생산과 소비가 동반 성장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생산량 증가가 소비량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근본적으로 생산량을 줄여 나가는 것이 관건이다.



주원산오리 이우진 대표
한국오리협회 이사

오리고기 유통구조 실태와 문제점

오리고기의 유통구조는 상당히 복잡하다. 우선 군납물량을 보면 연간 90만수 정도인데 이는 올해 총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리고기 8천600만수 중 1%에 불과하다.

또 전체의 75%는 전문식당을 통해 소비되고 나머지 대형유통매장이나 홈쇼핑 등을 통해 14%가 소비되고 단체급식 등으로

10%가 소비되고 있다.

단체급식에서 소비하는 오리고기중 대략 4% 중국산 오리를 사용하고 있다.

제품별로 살펴보면 신선육이 60%이며 훈제가 38%, 떡갈비 증 육가공제품이 2%정도 이다.

최근 급성장한 훈제오리는 80년대부터 등장했으며 전국에 훈제가공공장이 86개정도 운영 중에 있으며 경기가 좋아지면 곧바로 생산에 가담할 수 있는 20여 업체를 포함하면 106개에 이르고 있다.

오리산업은 거의 대부분 계열화가 이뤄져 있으며 계열화 중에서도 수직계열화 업체와 유사인티로 구분할 수 있다.

유사인티의 경우 경기가 좋을 때는 무분별하게 입식해 과잉 생산을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유통구조를 갖고 있는 오리산업이 보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재 오리고기 유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자와 제조 간의 거래가 활성화돼 있는 시장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적 고용불안과 고물가 시대, 국제 금융 및 금리부담 가중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심리적으로 소비를 줄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소비자들과 직접 다가설 수 있는 B to C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반조기 가공제품의 개발을 비롯해 소단량 포장의 대중화, 중량단위 판매 확대, 슈퍼마켓 등 대형유통매장을 통한 소비자와의 접점력 확보, 소비자 불만자율관리시스템을 보편화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가까이 갈 수 있는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산 오리고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한번 신뢰를 잃어버리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내 오리 인증제를 하루 빨리 도입해 실행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대외시장으로 일본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소비시기가 달라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 아울러 일본과 호주 등 교포사회를 겨냥한 시장개척과 함께 한식 세계화에 발맞춰 병행해 나가면 효과를 볼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리농가 실태와 문제점

오리농가들의 현실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다. 현장에서 겪고 있는 일을 주로 얘기 하자면 오리업계가 다른 축종에 비해 후발주자 이다 보니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너무 많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요구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것이 오리업계가 처한 실정이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축산관련 예산이 있는데 다른 축종의 경우 여러 가지 명목을 붙여 지원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전남도만 해도 한우나 양돈 부문에 투자되는 예산이 몇 백억 이상이 되는데 우리의 경우 아무것도 없었다.

그나마 오리협회 도지회에서 요구해 지분개량사업을 신청했는데 이마저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

지금 우리 오리농가들이 해야 할은 오리산업에 대한 대책을 무엇을 요구할지거나 아니라 어떻게 요구할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와도 타협하고 조율해 오리



죽림농장 대표 정정우
한국오리협회 광주전남도지회 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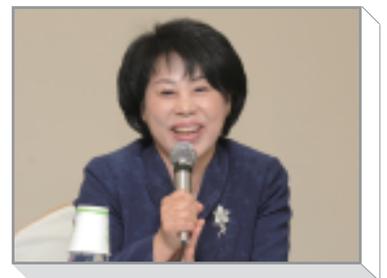
관련 예산을 얼마나 더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
 이와 함께 이제 축산농가들 역시 먹거리를 생산하는 축산이 아니라 보여주는 축산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지자체들이 환경부의 축사시설제한지역 설정 권고안이 나오면서 더 이상 축사가 들어갈 곳이 없어졌다.
 이도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축사보다 무허가 축사에서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축사시설제한지역을 설정하면 무허가 축사를 양성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때문에 현재 무허가축사나 시설이 낙후된 축사를 먼저 지원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시설을 현대화해 제대로 축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리농가들 역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각 시군 지자체 별로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오리관련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농가들 스스로도 변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대부분의 오리농가들이 계열업체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오리 가격이 떨어져도 수수료만 제대로 받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다.
 오리업계가 불황이 오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곳은 바로 농가들이다.
 그렇지만 많은 오리농가들이 나 몰라라 하는 식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 오리협회에 가입해 회비를 내는 농가들은 전체 오리농가의 10%에 불과하다. 우리 스스로 하나로 뭉쳐야만 오리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황이 오면 가장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곳도 바로 농가들이다. 불만을 내기 보다는 우리가 먼저 오리고기 홍보대사로서 소비촉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오리고기 소비 확대를 위한 제언

소비자입장에서 축산물은 중요한 식량이다. 이러한 식량으로서 국내산 축산물이 소비자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믿음과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오리업계는 물론 축산업계가 인정해야 할 것은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 적응하고 이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과 틀을 바꿔야만 살아남을 수



소비생활연구원 김연화 원장

있다.

소비자들은 오리고기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오리업계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은 소포장, 소단위를 원하는데 오리고기는 아직도 마리 단위로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오리업계 입장에서 굉장히 뒤떨어져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

또 소비자들은 단순히 가격과 맛을 떠나 안전성을 최우선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투명한 것을 선호한다. 내가 먹는 오리고기가 어디서 생산됐고 누가 키웠는지 도축은 어디서 했는지 가공은 어디서 했는지 유통과정은 콜드체인시스템에 의해 이뤄졌는지 하나하나 따지는 것이 소비자들이다.

때문에 식당에서 판매되고 있는 오리고기가 과연 몇 그램인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만약 이 같은 정보에 오류가 있을 경우 소비자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오리고기에 대한 선호도를 높여야 하는 것도 오리업계의 과제다. 오리고기가 몸 건강에 좋다고는 하는데 오리고기를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한 것은 이제 불과 10여년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아직까지 오리고기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소비자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오리고기에 대한 입맛을 심어주기 위해 학교급식에서 급식재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오리업계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간편일률적인 오리 요리도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보당 식당의 오리고기는 백숙 아니면 훈제오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오리고기 소비에 있어서 굉장한 아킬레스건이다.

같은 오리고기라도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다면 소비자들은 더 많은 오리고기를 먹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훈제오리, 백숙 등으로 한정돼 있어 보다 다양한 오리 요리 개발이 시급하다.

또 국내산 오리고기에 대한 인증제를 서둘러 실시해 중국산 등 수입산 오리고기와 차별화 할 수 있도록 해야만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들은 아직까지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신뢰가 높은 만큼 오리업계도 소비자들의 이러한 믿음에 맞춰 보다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에 전념한다면 생산자들 역시 국민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식세계화에 맞춰 우리 오리고기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종합토론



박순용 전 축협중앙회 회장

오리산업은 위기에 처해있다. 서옥석 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다. 원종오리의 확보문제에 대해서다. 협회에서 연구를 해서 GPS 농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축산과학원에서 신경을 써야하는 문제가 있다. 청둥오리를 개량화를 축산과학원에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청둥오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 단점도 있지만, 새로운 품종으로 만들어서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김정주 교수님께 묻고 싶다. 오리산업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너무나 많은데 김교수님이 연구를 하셨으니까 계속해서 오리산업 발전을 위해 연구를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한다.

오리산업 중심으로 생기는 법적인 제약, 그런 법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달라. 허가제나 축사시설이나 그런 문제에 대한 오리산업 발전에 대해서 말이다.

사육시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계열화사업, 이것이 다른 축종에서 이루어졌다. 오리산업은 타 축종에서 생기는 취약점을 파악하고 있으니 오리산업만은 더욱 완전하게 미래지향적으로 계열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중국의 오리산업을 보자면 중국은 사료비가 12.3%인데, 우리나라 생산비는 17.2% 사료비가 68.76%로 나타나고 있다.

사료에 대한 문제를 우리나라의 사료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각성문제도 있다.

사료산업을 연구해서 사료를 자기가 자급해서 원가를 절하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가에 대해 생각한다. 이것에 대해 연구를 하면 어떻게 될까?



배종울 고창군지부장

배종울 고창군지부장 _ 중요한 것은 지금 오리산업에 봉착한 문제, 오리업계 침체를 타계할 방안에 대한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오늘 이루어져야 이 자리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우진 주원산오리 대표 _ 당면 문제는 지난해 말 AI가 발생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

당시 협회 회원도 아닌 사람들이 F1 어마어마하게 키워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그래서 올해 5월부터 오리가 남기 시작해서 지금 상황까지 온 것인데, 2003년 AI 왔을 2005년까지 재고물량 1,600만수에 달했다. 그것을 모두 소비하기까지 2년이 걸렸다. 그러나 지금은 소비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2년까지는 안 걸

릴 것이고 내년 8월까지 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좀 전에 정정우 토론자께서도 종란, 새끼오리 폐기 지원 이야기 하신 것. 내년 3월까지 흑한기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면 육성율이 10%정도 떨어지게 되고 또 여러 요인으로 내년 초에 약 30~40% 생산물량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F1과 관련해서 협회 차원에서 단속과 감시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오리고기는 연 35~38% 꾸준히 소비가 성장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웰빙푸드에 대한 관심이 많다. 오리고기 소비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앞으로 5년동안에는 현재의 배는 될 것이다. 지속적인 성장은 가능하다.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지면 음식은 고급화 되는데 오리고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서옥석 축산과학원 가금과장 _ 박순용 전 축협회장께서 토종오리를 활용한 국산종자 개발 말씀하셨는데 그 자원이 있다. 내부적으로 청수종이라 해서 지금 500~700수로 계통조성을 해놓은 상태. 골든 씨드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시설은 금년에 완성하였고 내년부터 기획재정부에서 20억 지원키로 하였고 종자 개발만 7억정도 들여서 추진할 예정으로 내후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본래 청수종은 1.8kg인데 2.5kg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육 조성도 백오리와 어떻게 다른지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DNA 판별 기법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정주교수 _ 사료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현재 사료는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에 에탄올 생산이 늘어서 옥수수 가격이 치솟고 있고, 선물시장보다 현물시장에 의존하다보니 값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선물시장 관련 인재양성이 필요하다. 옥수수만 가지고 사료만 드나? 쌀을 이용한 사료 개발 등도 필요할 것.

법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세법에 대한건데 규모가 작은 농가는 소득세를 내고, 농업소득세는 안낸다. 축산소득세는 내게 되어있다. 앞으로 총선도 다가고 하니 국회에 이런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 오리자조금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의무자조금도 괜찮지만, 농가들이 스스로 내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오리고기는 수출을 해야 한다. 미국 출장가서 오리고기 주문해 보니 질기고 맛이 없음에도 찾아와 먹는 사람들이 있다. 만일 국내산 고품질 오리고기가 수출된다면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성에프시 권태균 대표

토성에프시 권태균 대표 _ 냉동육이 많이 있다보면 상당히 불안한 상태다. 신선육과 냉장육은 분명히 차이난다. 냉동육이라도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 공급해 주었으면 한다.

김정주교수 _ 추가 답변을 드리겠다. 타 축종은 계열과 농가들의 갈등관계가 너무 심각하다. 자조금도 안내는 상태다. 오리업계는 그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한다. 농가협의회를 만들어서 계열업체와 소통해야 한다.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로는 농가들의 불만이 많을 것이고 서로 상생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항상 자재가 문제다. 새끼오리와 사료문제 등. 자재는 농에서 직접 구입해 쓰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독일 등) 이런 식으로 하는 농가는 갈등의 소지가 사라진다.

좌장 박종수 교수

오늘 토론회를 진행하다보니 오리업계가 많이 외롭다는 것을 느꼈다. 이는 오리농가들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겪는 문제라고 본다. 한우만 해도 농가수가 많다보니 정부나 관련업계가 먼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줄려고 하고 있다. 반면 오리농가들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숫자만을 놓고 볼 때는 불리할 수도 있지만 소수 정예라고 생각하면 무한한 발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의 FTA가 체결되면 오리산업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보면 철저한 원산지 표시제만 정착된다면 국내 오리시장을 굳건히 지킬 수도 있다.

또 나아가서는 중국의 부자들을 대상으로 수출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수출창구를 일원화하고 안전한 오리고기 생산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오리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오리업계가 준비해 나가야 한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간편하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때문에 소포장 단위 제품 개발, 학교급식에 급식재료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 등을 개발한다면 향후 오리산업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